

보도시점 2026. 6. 24.(수) 10:00 배포 2026. 6. 23.(화) 10:00
(브리핑 시작시)

『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』 발표

- 급식카드로 부모가 술·담배 구매 등 부적정 사용 확인
 - 연간 미사용 충전금 연 약 171억원, 몰라서 방치
- ⇒ 급식카드 부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,
미사용 충전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개선

【국가정상화 과제】

※ (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) 22. 아동급식카드, 아동급식 외 부적정 사용 근절

- 국무조정실(실장 윤창렬)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보건복지부(장관정은경)와 합동으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,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.
- 아동급식카드(이하 ‘급식카드’)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들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음식점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급하는 카드이다.
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자,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자 자격과 1끼당 지원 단가를 지방정부에 권고하고 있다.
- 2025년 기준 182개 지방정부에서 급식카드를 발급·운영 중이며 약 15만명의 아동이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있다.
- * 모든 지방정부에서 아동급식 지원사업 시행. 급식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지방정부도 단체급식소 운영, 도시락 배달, 반찬 배달 등 다른 방식 운용

※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개요

- (지원대상)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자
- (지원기준) 1식당 10,000원 이상('26년 기준, 매년 복지부 권고-지방정부에서 결정)
- (시행주체) 지방정부(학기중 주말,공휴일, 방학기간 등)
- (예산현황) '25년 기준 5,621억원(지방비 100%)

○ 이번 조사는 급식카드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하였다.

- 급식카드를 운용 중인 182곳 지방정부의 급식카드 사용내용을 분석하고, 17개 광역시·도별 1~2곳의 시·군·구를 선정하여 현장 조사를 하였다.

□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급식카드 운용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.

① 급식카드가 아동의 식사와 무관하게 술·담배 구매 등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.

○ 전국 17곳의 광역시·도별 각 1곳의 시·군·구를 선정하여 표본 조사한 결과, 서울, 인천, 부산, 광주를 제외한 13개 광역 시도에서 급식카드로 술, 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었다.

- ▲ ○○시 거주 A는 일반마트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급식카드로 구매불가 품목인 세제, 휴지 등과 함께 담배를 구매(총 27만원 집행)
- ▲ ▲▲시 거주 B는 일반마트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급식카드로 과일 등을 구매하면서 구매불가 물품인 맥주를 함께 구매(총 4.2만원 집행)

- 카드 가맹점 중 편의점의 경우는 술, 담배에 대해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있었다.

- 다만, 대부분의 일반마트에서는 편의점과 같은 결제 차단 시스템이 설치 되지 않아 급식카드로 술이나 담배 등 아동급식과 무관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.

- 표본조사에서 술 담배 구매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4개 광역 시도(서울, 부산, 인천, 광주)는 일반마트의 급식카드 가맹점 등록을 최소화하고 있었다.

○ 또한, 식당을 운영하는 결식아동의 부모가 자신의 가게에서 급식카드 충전금 전액을 허위 결제하거나(총 55명, 약 1억 7천만원), 일반 마트 업주와 모의하여 자녀의 급식카드를 마트에 맡겨 두고 세제, 휴지 등 생활용품 등을 다량으로 일시 구매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.

- | |
|--|
| <p>▲ ●●시 거주 C는 중학생 자녀에게 발급된 급식카드를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 가게에서 일일 사용한도인 3만원씩 급식비 전액인 총 1,295만원 허위결제('22.1월 ~ '26.4월)</p> <p>▲ ◇◇시 거주 결식아동 부모 D는 인근 마트에 급식카드를 맡겨두고,
- 일일 사용 한도인 4만원으로 허위결제 후 한도액을 초과하는 29만원 상당 금액의 생활용품 등을 일시 구매(총 230만원 집행, '25.1 ~ 8월)</p> <p>▲ ■■시 거주 결식아동 부모 6명은 인근 마트에 급식카드를 맡겨두고,
- 일일 사용 한도인 4만원으로 매일 허위결제 후 실제로는 한도액 초과 금액으로 생활용품 등 일시 구매(총 11백만원 집행, '25.1 ~ 8월)</p> |
|--|

② 아동급식 취지에 맞지 않거나 무관한 업종 또는 시간에서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○ 182곳 지방정부의 '25.1~8월까지의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, 전체 발급카드의 약 14%(2.2만장)가 1회 이상 식사와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 사용되었고, 카페에서 약 11억원(0.5%), 학원·병원·미용실 등 생활시설(약 1억4천만원), 술집(약 7백만원), PC방·만화방 등 오락시설(약 5백만원) 등에서 총 1억5천만원(0.1%)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○ 또한, 일반적인 식사시간이 아닌 심야시간(22시~06시 이전)에 결제된 금액이 전체 급식카드 결제금액(2,096억원)의 약 4.4%인 약 93억원에 달했다. 사용내역으로는 편의점(약 40억원, 42.9%), 일반음식점(약 37억원, 40%), 카페(약 3.2억원, 3.4%) 등에서 사용되었다.

③ 급식카드 발급 및 자격변동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○ 지방정부는 보건복지부의 표준매뉴얼에 따라 급식지원 결식아동을

복지정보 통합시스템인 ‘행복e음*’에 등록하여 상시적으로 자격
적정여부를 관리해야 함에도 일부 지방정부는 ‘행복e음’에 등록하지
않고 별도의 카드발급 시스템으로만 관리하고 있었다.

* 정부 복지사업 및 대상자 사례관리를 위해 모든 지방정부 소속 사회복지공무원이
사용하는 업무용 시스템(복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)

- 이에 따라 충전식 선불카드인 급식카드에 가상의 사용자를 입력하여
가상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.

○ 또한, 결식아동의 시설 입소, 사망, 학교 졸업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
확인하여 적시에 급식카드 사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
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.

- 이에 따라 부모가 결식아동을 학대하여 아동과 부모가 분리(보호시설
입소)된 후에도 부모가 급식카드를 사용하거나(14명, 약 550만원), 아동이
사망한 후에도 본인의 식사비 등으로 급식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
있었던 사례(1명, 약 61만원)도 있었다.

▲ □□시 거주 E는 '25.1월경 미취학 자녀 2명을 학대(정서학대)

- E는 자녀가 아동학대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8개월 동안 식당 등에서 자녀의 급식
카드를 본인의 식사비 등으로 사용(약 200만원)

▲ ◆◆군 거주 F는 '25.6월경 미취학 자녀 2명을 학대(방임)

- F는 자녀들이 아동학대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2개월 동안 편의점 등에서 본인의
생활비 등으로 사용(약 47만원)

④ 결식아동이 급식카드에 충전된 급식비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 자동
소멸되는 금액이 많았다.

○ '24년 기준 카드 충전액 중 전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된 금액이 총
171억원으로 전체 충전금액(약 2,207억원)의 약 7.8%에 달했다.

- 미사용 원인으로서는 카드 사용시 아동의 낙인감 우려, 사용방법 미숙지
등으로 확인되었고, 충전금액의 10%도 사용하지 않은 아동도 4,800
여명에 달했다.

□ 정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에 아동급식카드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고, 이를 점검 및 지원할 방침이다.

① 아동의 급식목적 외 사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카드사 가맹점 및 결제시스템 등을 개선한다.

- 지방정부가 카드사와 협의하여 술·담배 등 금지품목 결제제한 시스템을 일반마트까지 확대하도록 한다. 결제제한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소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허위 결제나, 생활용품 구매 등 구매내역을 수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도록 할 계획이다.
- 또한, 술집 등 아동의 식사 목적에 맞지 않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자동 제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, 기 등록된 가맹점도 업종을 재확인하여 부적정 업종은 가맹점에서 신속하게 제외하도록 하며, 심야시간 이용도 제한토록 할 예정이다.
- 가맹업주들을 대상으로는 허위결제 등 부모의 부정사용 등에 협조 사실이 적발된 경우 가맹점 제외 등의 조치를 지방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.

② 급식카드 발급 및 이후 자격변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.

-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담당자의 카드발급 이후 행복e음 시스템 등록 의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.
- 또한, 시스템에 등록된 아동이 시설 입소, 사망, 학교 졸업 등 변동이 있는 경우 담당자가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행복e음 시스템 변동 알림 기능을 연내 개선하고, 지방정부의 급식카드 발급시스템과 행복e음과의 정보연계도 지원할 예정이다.
- 아울러, 자격변동 여부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정사용이 의심되거나 장기 미사용 아동 등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,
 - 이러한 지침개정 및 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정기교육도 마련할 계획이다.

③ 아동의 식사권이 지원액만큼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카드 사용방법 및 미사용 충전액 등 안내를 강화한다.

- 카드발급시 사용방법 등 사전안내를 강화하고, 사용액이 적은 아동 가구에는 사용가능 잔액 안내(문자알림 등)를 통해 사용을 독려한다.
- 카드사용을 주저하는 이유로 지적된 낙인감 우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8월부터 18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카드 색상, 표기 등 디자인에 불필요한 낙인효과 요소가 있는지 선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미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.
- 이를 통해 급식카드가 다른 보통의 카드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용 아동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.

□ 김영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은 “지방정부가 급식카드 발급에 치우쳐 관리에는 소홀한 부분이 확인되었다. 새로운 지방정부가 시작되는 만큼 아동급식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”라면서,

- “급식카드의 경우 장점도 있지만 도시락·반찬 배달 등 급식지원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대안의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”라고 밝혔다.

□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“아동급식카드의 본래 취지에 맞게 부적절한 품목 결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”이라며, “아동들이 이용가능한 식당이나 잔액을 몰라 지원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용자 맞춤형 안내도 대폭 강화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이어 “행복e음 시스템을 정비해 대상자의 자격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”이라며, “비록 지방이양사업이지만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급식카드가 현장에서 더욱 실효성있게 관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현안점검과	책임자	과 장	안정륜	(044-995-2030)
		담당자	서기관	정성욱	(044-995-2047)
	조사관		윤경영	(044-995-2032)	
	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	책임자	과 장	장영진	(044-202-3430)
담당자		주무관	최시내	(044-202-3438)	



참고 1

결식아동 급식지원(지방이양 사업) 개요

- (추진근거)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 제2항 및 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에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사항 지원 의무 부과
 - '05년 지방이양으로 지원기준·방법·절차 등은 지방정부 조례로 규정
 - * 보건복지부는「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매뉴얼」을 통해 급식단가 등 권고
- (지원대상) ^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가정 등의 아동, ^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*, ^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(지역아동센터, 복지관) 등 총 273천명('25년)
 - * 교사, 사회복지사,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

구분	합계	기초수급자	차상위계층	기타*
'25년	272,646명	164,688명(60.4%)	14,907명(5.5%)	93,051명(34.1%)
'24년	272,400명	164,143명(60.2%)	14,069명(5.2%)	94,188명(34.6%)
'23년	277,394명	164,509명(59.3%)	14,323명(5.2%)	98,562명(35.5%)

* 한부모(7.9만명), 교사 등 추천 아동(2천명) 등

- (지원기준) ('26년) 1식 10,000원 이상 지원 권고
- (시행주체) 교육청과 지방정부 재원 분담·지원

구분	학기 중				방학중(연중)
	평일		토·공휴일		
	조·석식	중식	조·석식	중식*	조·중·석식
담당기관	지방정부	교육청	지방정부	교육청	지방정부

* 학기 중 주말·공휴일 중식은 지방정부에서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

** 아동이 원하는 급식지원 유형(조·중·석식)을 선택하나, 평균 1일 1~2식 제공

- (전달체계) 개인 신청 및 지역사회 발굴·추천(읍면동, 시군구 등) → 대상자 접수·자격 조회 및 결정(시군구) → 지방정부별 지원 방법에 따라 급식 제공
- (제공유형) 해당 아동 가구의 취사 능력,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, 아동의 영양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
 - 단체급식소(지역아동센터, 복지관 등), 일반음식점(아동급식카드), 도시락·부식 배달, 기타 그 밖의 시·군·구청장이 정하는 방법(부식 지원, 식품권 등)

참고 2

아동급식카드 실태조사 관련 통계

□ 부적정 업종 사용 현황

< 부적정 업종 사용 현황 ('25. 1 ~ 8월, 지방정부 취합자료) >

구분	사용카드 수(개)	결제건수(건)	결제금액(천원)
전체 사용 (A)	156,548	12,385,017	209,616,326
부적정 업종 사용 (B)	21,958	90,420	1,247,623
카페	21,326	85,304	1,091,184
술집	194	290	7,282
오락시설 ¹⁾	107	620	5,071
생활시설 ²⁾	331	4,206	144,086
비율 (B/A, %)	14.0	0.7	0.6

* 1) 키즈카페, 보드게임방, PC방 및 만화책방 등 오락시설

2) 학원, 병원, 미용실, 세탁소 등

□ 심야시간 사용 현황

- 급식카드를 운용 중인 지방정부(182개)에서 심야시간(22시~06시 이전) 92억원(전체 집행액의 4.4%) 사용

< 심야시간 급식카드 사용 현황 ('25. 1 ~ 8월, 지방정부 취합자료) >

구분	사용카드 수(개)	결제건수(건)	결제금액(천원)
사용 (A)	156,548	12,385,017	209,616,326
심야시간 사용 (B)	85,773	640,935	9,207,295
비율 (B/A, %)	54.8	5.2	4.4

□ 미집행 현황

- 사용 시 낙인 우려, 사용 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연간 소멸액이 약 171억원('24년)으로 총 충전금액(2,207억원)의 7.8%로 조사

< 급식카드 집행률 현황 ('25. 1 ~ 8월, 지방정부 취합자료) >

총 발급카드	충전금액	집행금액	미집행액	집행저조 카드*
160,877개	2,207.4억원 (100%)	2,036.1억원 (92.2%)	171.3억원 (7.8%)	4,811개

* 전체 발급카드 중 충전금액의 10% 미만으로 사용된 카드 수